

오피니언

다산포럼

차미레



태풍과 증시 폭락이 동시에 한반도를 덮쳤다. 지난 8월 9일 월요일, 모든 뉴스 미디어는 한마디로 ‘난리’였다. S&P 신용평가사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발표를 계기로 전 세계 금융계가 충격에 흔들리면서 국내증시도 대폭락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휩싸여 가진 주식을 투매했다.

신문 1면마다 ‘검은 월요일, 증시 비명’, ‘증시 패닉-끝없는 추락’같은 주먹만한 제목들이 실렸다. 태풍 ‘루이파’가 남서해안을 강타, 6명이 사망 실종한 재난기사가 멀쩡히 지방뉴스면까지 밀려나갈 정도였다. TV 채널들은 2~3일 동안 시황판과 세계증시 소식을 연속 보도했다. 태풍관련 뉴스와 금융재난의 공포와 불안이 지배한 며칠이었다.

경제를 알아야 잘 살 수 있고 경제위기, 경제문제 해결 없이는 사람이 숨도 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나 같은 비전공자도 마찬가지다. 어린이 경제교육, 경제과와까지 등장한 지 오래다. 말이 경제지, 온 세상이 돈 얘기로 가득 차다. 더구나 이 정권 들어서 더욱 심화된 사회 양극화로 하위계층에게 이 말은 목숨이 걸린 절박한 화두가 되었다.

내가 기자 초년병시절에 번역했던 이탈리아작가 조반니노 파레스끼의 소설 ‘돈까밀로 신부와 빠쁘네’ 시리즈에 “코끼리와 여자는 잊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그 시기에 있었던 닉슨 독트린 선언을 지금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워터게이트 도

청사건으로 쫓겨나는 등 도덕성엔 문제가 심대했지만 추진력에서만큼은 과력을 발휘하던 닉슨은 당시 베트남 전비 등 경제부담이 심화되자, 달러를 찍을 때마다 일정량의 금을 사서 연방은행에 보유해야 하는 금본위제를 견어쳐버렸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되고 필요하면 요즘처럼 무제한 찍어서 풀 수 있는 근거가 그때 마련된 것이다. 권력을 쥔 자가 그릇된 방향으로 밀어붙이기를 하면 어떤 악영향을 두고두고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구나 경제를 위해선 공중에서라도 달러를 뿌리겠다는 ‘헬리콥터 버냉키’가 금융의 수장이 된 이후로 ‘돈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세계는 미국의 입만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다.

어쨌밤 뉴욕 시황에 따라 오늘 한국 증시가 요동을 치는 이 와중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선거자금으로 3000억원을 주었다고 밝히 세상이 시끄럽다. 수십만 명의 전국 정당 조직을 운영해야하는 ‘한국적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선거자금 명목의 그 돈이 YS에게 직접 흘러들어 갔을까.

1981년부터 일간신문에 출판전문 지면을 만들고 여러 신문에서 서평지, 북리뷰 섹션 등을 운영해왔던 내게는 원칙이 하

돈의 반격

나 있다.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과장, 허위가 많은 회고록-자서전류는 어떤 외압이나 청탁에도 무조건 신지 않거나 한 줄짜리 단신으로 신는다. 물론 빈민운동에 평생을 바친 고(故) 제정구 의원 같은 경우는 예외였다.

‘타임’지 표지에 거액 비자금 받은 범죄자로 나란히 실렸던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수의차림 모습을 기억하는 나는 3000억이든 1000억이든 실감도 아닐만큼 거액의 돈 얘기가 본질로 보이지 않는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부도덕한 전직 대통령들과 그들의 5·18 라인이 최초의 문민대통령에게 “3000억을 주었다”며 도

전한 느낌이 든다.

상당기간 주었네, 안 받았네 정치공방이 계속되겠지만, 나는 내 서평의 원칙을 지킬 것이다. 책의 팩트(fact)를 확인해줄 자자가 중병으로 발언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대리인들의 정쟁은 무시하겠다.

개인적 호오(好惡)를 떠나서 나는 확실히 기억한다. 3000억을 받았다는 상대는 대통령 취임 후 절대 불가능하던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고, 임기 말에 친족의 권력형 비리가 밝혀지자 친아들을 사법처리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었으며, 한뼘 쟁겨 나와 거액의 추정금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어떤 식이든 그 선거자금을 지급받아 소진했다면, 뒤늦게 “3000억 원의 반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이 거침없이 전 세계에 뿌려 댄 달러의 반격으로 휘청대고 있듯이, 국가든, 개인이든 돈의 반격에는 심한 상처와 타격을 입게 마련이다.

국고를 내 돈 쓰듯 마구 써버려서 거덜 냈거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몰아주는 식을 고집했던 ‘토건정치인’들이 비자금까지 챙긴 게 사실이면,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돈의 반격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나는 국민이 감당해야 할 빚수습과 국가부채의 짐이 두렵다.

〈인문인·번역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GO 칼럼



이재웅

최근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댄스, 밴드, 코스튬프레이, 연극, 뮤지컬 동아리들이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청소년 동아리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도 존재한다. 이들 동아리들이 지나치게 문화·예술에만 치중하다보니 청소년들이 종합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청소년 단체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청소년 단체의 활

새로운 청소년 자치, 클럽공동체를 꿈꾸며

동은 농촌계몽운동(60년대), 사회개발운동(7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80년대), 참교육 학생운동(90년대) 등 사회적인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다.

세계 최초의 NGO는 1844년 영국에서 탄생한 YMCA다. 한국 최초의 NGO 또한 1903년 만들어진 황성기독교청년회(현재의 서울YMCA)다. 광주YMCA도 지난해에 창립 90주년(1920년에 창립)을 맞이했다.

광주YMCA 창립 이전인 1911년 당시 송일학교YMCA(지금의 송일고)가 창설되었다. 광주에 송일학교Y 창립을 기준으로 할 때 올해가 정확히 청소년YMCA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HI-Y는 1952년에 광주제일고, 광주공업고등학교, 송의고등학교, 광주사범학교 등에서 창립되었으며, 당시 HI-Y의 목적은 ‘학교, 가정, 사회 안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높은 생활수준을 창조·유지·발전시키고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클럽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강령으로서 깨끗한 언어(Clean Speech), 깨끗한 운동정신(Clean Sportsmanship), 깨끗한 학문(Clean Scholarship), 깨끗한 생활(Clean Living) 등이 있었다.

1950년대의 구호지만 지금에 대입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시대를 앞서 나가는 강령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또 광주고Y(1953), 조대부고Y(1954), 농업고Y(1954/현 자연과학고), 상업고Y(1954/현 동성고) 등이 창립되어 경로원 위문행사와 토론회 등의 자치활동을 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청년지’ 1958년 5월 10일자에는 “광주고 HI-Y 클럽은 근래 진지한 토론 프로그램으로 귀중한 클럽생활을 지내고 있는데 이중 수 생성 지도하여 ‘학생과 도의’라는 주제 아래 ‘학생과 교육가구’,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우’라는 주제로 나누어 사색과 실천의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글

이 실려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치활동으로서 ‘교교-Y’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여 오다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해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30년, 40년 넘는 오랜 전통클럽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이 강화되면서 청소년 자치 및 클럽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고 학교와 학원이라는 챗바퀴 안에서 돌다가 급기야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불편한 현실이다.

청소년들이 댄스 동아리에 집중하는 것도 시대정신이라고 하면 딱히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지나온 역사에서 청소년들이 결코 그 시대의 소명을 외면하지 않았듯 우리 사회가 좀 더 다양성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청소년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시금 전통을 바탕으로 지금 시대에 맞는 청소년의 클럽활동을 재창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올해로 광주에 청소년YMCA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청소년의 자치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꿈을 찾고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꿔본다.

〈광주YMCA 청소년팀 간사〉

축제를 교육기회의 장으로

니 실패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도 경험 부족에 의한 시행착오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 판 주도로 축제가 진행되다보니 축제의 주인공이 소수의 관 소속 공무원들이 되고 지역의 주민은 구경꾼이 되기 십상이다. 이런 축제의 가장 큰 문제는 핵심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을 모방하여 실시하다보니 별로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이 필수다. 참신하고 수준 높은 축제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나아가 대학이 연계하고 끊임없이 학습을 통하여 축제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지난 7월말에서 8월 4일까지 전라도 맨골

정남진 장흥과 청자고를 강진에서는 물과 불을 주제로 한 축제가 개최되었다.

물은 아주 흔한 것 같지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 나라도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불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한 자원이다. 이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그릇을 만들어냈고, 그 가운데 고려청자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축제는 이렇게 중요한 물과 불이 한데 어우러져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이번에는 작은 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축제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함께 힘

을 모아 외부 관광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둘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협력해 연계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돋보였다.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것만이 아닌 체험을 통해 물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었다. 또한 교과서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청자의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옛 선조들의 숨결을 느꼈던 역사의 의미가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일본의 축제현장에서 100만명 이상이 모이는 가운데도 무서울 정도로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많은 인파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내년에도 범람없이 개최될 축제, 모처럼 맞이한 방학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함께 물과 불이 만들어 내는 삶의 윤기에 대하여 체험하게 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광양여중 교장〉

특히 고령화 사회가 날로 확대되는 우리나라는 자식의 부양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살며 죽음의 나날만 기다리는 노인들이 급증

하는 추세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내놔야 하겠다.

▲이재경·광주시 북구 생용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MB의 ‘공생 발전’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국정운영 철학의 ‘키워드’는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다. 이는 ▲경제와 사회 발전의 양적 향상만큼 질적 제고 담보 ▲발전 결과물의 계층·지역간 격차 축소 기여 ▲‘승자독식 구조’가 아닌 함께 과실을 나누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 성장 개념이라고 한다.

MB가 이날 언급한 공생 발전은 올바른 국정방향이다. 요즘 우리 사회가 계층·지역,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심화로 심각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공생 발전을 언급한 것도 우리 사회의 각 주체 중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반영한다.

하지만, 공생 발전은 말이나 구호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MB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 사회’를 후반 기 국정운영 화두로 내세웠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공정 사

회가 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오히려 공정 사회가 퇴보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

공생 발전과 공정 사회는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가 계속되고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버젓이 고위 공직자로 임명돼선 공정 사회와 공생 발전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빈부격차, 학력차별, 공직비리 등이 관을 치는 사회에서 ‘공정’ ‘공생’은 찾을 수 없다. 특히 ‘호남 배제’와 같은 지역차별은 국민통합을 해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다.

MB의 임기는 이제 1년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은 거창한 구호나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공정·공생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적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말만 앞세우고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민심은 MB정부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이다.

광복절이 무색한 독립유공자의 비참한 삶

일본 유학시절인 1943년 항일운동을 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 최창모(88)옹은 광복 66주년을 병원에서 맞았다. 올 초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친 뒤 패혈증까지 겹치면서 거동은 물론 의사소통마저 어려운 상태다.

신상참배를 거부하고 한국인 차별에 항의하다 일본 경찰에 잡혀 감옥에 갇히기전(85)옹도 보훈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일본 경찰에게 당한 고문으로 다리 관절 등이 악화돼 거동조차 못하고 있다. 조국 광복을 위해 일제의 총칼에 항거한 독립유공자 1세대들이 병마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독립유공자 1세대는 광주에 7명, 전남에 4명 등 11명이 생존해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7명은 80대 후반의 고령과 병환으로 정부가 주는 ‘취괴리’ 생계비 등으로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광복의 기틀을 세운 독립유

공자들이 국가로부터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광복절 등 기념일에만 반짝 관심을 보일 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뒷전이다.

정부가 정작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소홀히 대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이렇고도 유사시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제라도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예우해야 한다.

일제 잔재와 친일 청산 역시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아직도 친일과 후손들이 재산찾기에 나서는 등 특례를 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민족정기를 모아 친일을 청산하고 미래를 향한 자긍심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이 독도를 병합화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생떼를 쓰는 망언도 국민적 일체감 앞에 선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無 等 鼓

대기업이 불만 조사까지 한다고?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돈벌이를 위해 쉬쉬하며 벌여왔던 사업

이다. 이른바 ‘MRO’사업이다. 유지(Main-tenance)하고, 보수(Repair)하며 운영(Operation)한다는 뜻의 약자로 기업에 소모성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물론에서 복사지 등 사무용품과 책상과 의자 같은 집기는 기업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모품들이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이 이 이윤 증대를 위해 MRO사업을 자체적으로 벌이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소모품 조달만 하더라도 매출이 엄청나다. 대기업이 MRO를 운영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납품업자의 영역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대기업이 자녀나 친인척에게 MRO사업을 맡겨 ‘땅짚고 헤엄치기’를 만들어주는 형국이다. 결

국, 돈으로 약자의 사업 진출 기회를 봉쇄한 채 또 다른 부를 창출하는 후진국형 재벌문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CEO들은 조선 중기 학자 명재(明齋) 윤증(尹拯·1629~1714)의 숭선수범을 새겨볼 일이다. 충남 노산의 노성명 일대에서 부유하게 지냈던 명재는 살아 생전에 윤씨 집안 사람들에게 양잠업 금지령을 명했다.

그는 “윤씨들은 절대로 누에를 치지 마라”고 엄명을 내렸다고 한다. 당시 양잠업은 고소득 업종이었는데, 권세 있고 부자인 양반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양잠에 진출하게 되면 서민들이 생계 수단을 빼앗길 것을 걱

정했다. 최근 삼성을 비롯한 몇몇 대기업이 상생을 위해 MRO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대기업들이 명재의 당부대로 ‘누에치기’에서 손대는 것은 고사하고, 개미들의 밭줄 끊는 일만큼은 없었던 한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기 고



김광섭

인간의 삶은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일의 연속이다. 그래서 때때로 힘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힘의 과정에 축제가 있었다. 시대가 진화하면서 삶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 축제가 만들어지고 탄생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각 자치 단체에게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지역의 특산물, 특징 등을 이용한 축제들이 생겨났고, 일부 축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급하게 만들어진 축제가 많다 보

고령화 사회 홀로사는 노인 관리대책 필요하다

면 친척 어른신이 최근 팔순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고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지만 몇 해 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탓에 지금껏 혼자 살고 계셨다. 그 때문인지 세상을 떠난 지 며칠 뒤에야 마을 주민들에게 발견됐다고 들었다.

부음을 전해듣고 ‘고독사(孤獨死)’라는 말이 떠올랐다. ‘고독사’는 홀로 사는 노인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사망 한참 뒤에 발견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 주위에는 오랜 시간을 가까운 일가

친척이나 파벌이 한 명 없이 고독하게 말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변하면서 더욱 그렇게 되고 있다.

독거노인은 나이가 많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특하나 위급 상황 시 누구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항상 안고 산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 없이 죽는 문제도 복지국가의 책무이자 사회적 관심사이여야 한다.